

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대응전략 보고

1. 추진배경

- ☐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및 재생e 발전 연계 증가에 따른 전력망 역할 증대
- ☐ 입지 선정·인허가 지연 등 전력망 건설 지연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

2. 추진방향

- ☐ (발전제약 해소) 신기술 도입 및 제도 완화를 통해 장·단기 송전용량 확대
- ☐ (법령 제·개정) 전력망위원회 설치, 입지선정위 법제화로 인허가 지연 해소
- ☐ (시공기간 단축) 신규 장비 도입 및 안정적 인력 수급으로 시공 자원 확대

3. 대응전략

☐ 단기(~'27년)

- (발전제약 해소) NWAs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 활용 3.6GW 확보
 -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, 유연송전설비 적용으로 송전용량 확보(2.6GW)
 -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 도입으로 주파수 안정도 개선, 용량 확보(1.0GW)
- (법령 제·개정) 전력망혁신법, 전원촉진법 제·개정으로 합리적 지원·보상
 -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
 - 전원촉진법 개정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투명성, 공정성 확보

☐ 중장기

- (발전제약 해소) 동적 송전용량 산정 기술 도입 및 신뢰도 유지기준 완화
 - 동적 송전용량 산정 기술 도입으로 송전용량 확대 및 경제적 설비 운영
 - 신뢰도 유지기준 완화(고장 : 이중→단일)로 계획단계 보강 물량 축소
- (시공기간 단축)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송전 전기원 확보 추진
 - 신규 터널 장비 도입을 위한 품셈 개정 및 터널 시공 속도 향상 추진
 -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, 세부 방안 법무부 협의 및 인력 도입

4. 향후계획

- ☐ 전사 전력망 적기건설 다짐대회 시행 : '24. 12. 16
- ☐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전략 산업부 및 국회 보고(CEO) : '24. 12. 30